



산업보건 주요뉴스



산재 근로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직업 복귀율 69%까지 높인다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 (2023년 3월, 산재 근로자 대상 서비스 개시)

매년 10만 명이 넘는 산업재해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중 약 6만 명은 숙련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산재 근로자가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직업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직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맞춤형 직업 복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그간 공단의 잡 코디네이터가 유선 및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이 필요한 산재 근로자를 찾아내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업 지원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선정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요양·재활 서비스나 직업훈련·일자리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69%까지 끌어올려 산재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적용 기준 합리화

(2023년 6월, 2023년 산재보험료율(고시)에 반영)

고용노동부는 합리적인 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해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분리하는 등 요율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동일한 장소에서 복수의 사업을 하더라도 산재 보험료율은 28개의 사업 종류 가운데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하나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기존 근로자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많아지는 경우가 생겼고, 이들이 소속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증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분리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산재 신청 시 근로자 불편 경감(2023년 7월, 전산 연계)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할 때에는 ‘건강진단결과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근로자는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했고, 서류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산재 요양 결정이 늦어지기도 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건강진단결과표’를 전산으로 받아 산재 근로자의 불편을 줄이고 산재 조사 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단은 산재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4월 26일부터 ‘진료 정보 자동 입수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그간 산재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에는 자기공명영상(MRI), 전산화단층촬영(CT) 등 의료

영상 정보를 직접 공단에 제출해야 했지만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정보를 연계하여 공단이 해당 정보를 자동으로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22년 7월 26일부터는 산재 근로자의 유족이 산재 유족급여 등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법원행정처와 전산 정보를 연계하는 등 산재 신청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줄이고자 다각도로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 강화(2023년 신규 추진)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①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②국소배기장치 설치, ③휴게시설 설치 등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 ① 충돌·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로봇 작업 스마트 통합안전 시스템 등 신기술을 적용한 안전 시설·장비
- ② 작업장 내에 유해 물질이 확산되거나 근로자에게 노출되기 전에 포집하여 배출하는 장치
- ③ 근로자의 신체 피로, 직무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공간



국제노동기구와의 협력 확대, 개도국 양질의 일자리 달성에 기여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사무국은 11.10.(목) 15:00(현지 시간), 국제노동기구 본부(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약정은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과 리 키엘가르드(Rie Vejs-Kjeldgaard) 국제노동기구 개발협력국장 간 체결된 것으로 제346차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기간 중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04년부터 국제노동기구와 개발도상국의 고용노동분야 정책·제도 개선 및 국제노동기준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1년 5월 ‘아세안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최저선 이행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3년간 390만 불을 지원하는 약정을 이미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약정으로 추가되는 사업은 ‘BETTER WORK 방글라데시’ 사업과, ‘Global Accelerator’ 사업이며 우리 정부는 '22~23년간 총 82만 불(환율 1,400원 기준)을 국제노동기구에 지원한다. ‘BETTER WORK 방글라데시’ 사업은 방글라데시 의류업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관리직 승진교육, 모성보호 증진 등을 위한 사업으로 이미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다수 국가가 참여 중이며,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미국과의 협력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Global Accelerator’ 사업은 국제노동기구가 비교적 최근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 세계적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국가들에 대한 국제적 정책 공조 및 투자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4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및 40억 명의 사회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리 키엘가르드(Rie Vejs-Kjeldgaard) 국제노동기구 개발협력국장은 ‘Global Accelerator’ 사업은 유엔사무총장이 '21년 9월 정책 브리프를 발표할 정도로 향후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의 중점 사업으로 발전시킬 사업이라며 이번 한국 정부의 선제적 지원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추가적인 협력사업 추진으로 개도국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달성을 위한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우리의 기여가 한층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